



신문협회보

제562호 2017년 2월 1일

전화 02-733-2251

www.presskorea.or.kr

제60회
신문의 날
표어

- 시대보다 한 발 먼저, 독자에게 한 걸음 더
- 신문 읽는 습관, 변화의 시작입니다
- 아빠, 이젠 저도 신문을 볼래요~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Readers are Leaders

<advertorial·기사형 광고>

뉴스제휴평가위 ‘애드버토리얼’ 제재하겠다 신문사 경영에 큰 위협…업계 대응책 긴급 모색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신문지면에 실린 특집 기획기사 등에 대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로 판단, 일반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할 경우 모두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업계는 선진국 언론을 중심으로 네이티브 광고(native ad)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사형 광고가 신문사의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신문사 영업권과 생존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협회 산하 광고협의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위한 방안을 긴급 모색 중이다.

제휴평가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제휴매체 재평가, △광고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다. 평가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9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에 따른 제재 규정을 구체화한 바 있다.

그러나 20일 열린 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 회의에서는 “어부징, 선정성 등 유해한 콘텐츠는 적극 제재해야 하겠지만 정보성 기획특집 등 기사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게 아니다”라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현실 적합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신문사 관계자는 “종이신문의 기획 특집은 정보 콘텐츠로서 열독률이 높다”며 “기사형 광고는 신문사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한 형태로 기사 내용에 기업(기관) 등의 명칭, URL 등 연락처가 명시되더라도 기사 작성자의 분석과 평가가 있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기존	개정(2016.11.9.)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①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전송 : 기사 본래의 정보전달 목적이 아닌 기사로 포장된 광고·홍보 목적이 분명한 기사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ㄱ)일반적인 기사와 달리 기사 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 (ㄴ)홍보회사, 광고회사에서 작성 또는 제공한 원자료를 거의 그대로 기사 형식으로 만든 경우	①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 기사 본래의 정보전달 목적이 아닌 기사로 포장된 광고홍보성 기사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에 한한다. (ㄱ)좌동 (ㄴ)좌동 (ㄷ)특정 업체·브랜드를 광고홍보할 목적이 분명한 시리즈 기사나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ㄹ)기사 본문의 영역의 내용이 실제로는 광고이나 해당 기사의 일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특히 상호명, 상품명 등을 게재하거나 이와 관련된 광고성 키워드, 동영상, 이미지 등을 기사로 위장해 노출하는 경우

는 경우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스와 홍보성 생활 정보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게 목적이려면 포털 뉴스 면에 별도 카테고리를 추가해 기사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익 광고, 부동산, 교육, 여행, IT, 건강 등 정보성 콘텐츠는 현행대로 인정하되,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

치거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는 차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사형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송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은 지금도 간접광고(PPL), 협찬고지, 가상광고 등 광고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정부가

중간광고마저 허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크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평가위 활동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평가위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포털의 뉴스노출알고리즘 개선 등 온라인 뉴스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은 채 매체사 제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검 옆에 ‘뉴스 토픽’ 신설…포털뉴스서비스 개선 첫걸음

노출알고리즘 개선·위치기반서비스 등 갈길은 멀어

사실상 어부징을 유도하고 있는 포털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시간검색어) 서비스가 개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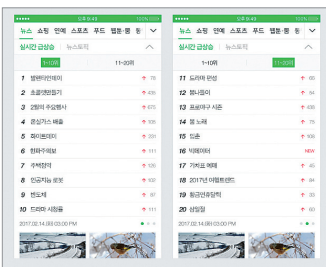
네이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위 더보기’ ‘검색어 트래킹’ 기

능 등을 추가하는 실검 서비스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적용된 ‘순위 더보기’ 기능(사진)은 실검의 순위를 기존 10위에서 20위까지 확장해 사용자들이 차트에서

사라진 검색어의 현재 위치 및 변화 추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다. 3월 중 추가될 ‘검색어 트래킹’ 기능은 하루 동안 해당 검색어가 매 15초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사용자들은 그래프를 통해 사

라진 검색어가 하루 동안 차트에 진출입하는 횟수와 순위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검색어의 순위 변화가 표시되는 범위는 최대 50위 정도까지 될 것으로 네이버측은 예상하고 있다.

▶2면에 계속



협회, 연수자선발 투명성 강화 위한 2가지 대안 제안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이견 조정 요청

민간 공익언론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이견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신문협회는 1월 20일 국무조정실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 양 부처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그간 문체부 등 타 부처와는 다르게 민간 언론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지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권익위는 자체 유권해석을 통해 △사기업의 기자 연수비용 지원과 관련한 별도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연수지원이 특정 직종에 국한해 이뤄지고 있는 점 △지원금액이 통상 1년에 1인당 5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의 주장을 내세워 민간 언론

재단의 언론인 연수지원은 불가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이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만약 민간 언론재단의 해외연수 지원자 선발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문제가 된다면 연수 지원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투명성 강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올바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연수지원

자 선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① 민간 언론재단이 외부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의무화’하고 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지침 등을 공개하는 방안과 ②나아가 심사위의 구성 방법까지 미리 정해두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민간 언론재단 측에서는 늦어도 2월까지 언론인 연수 지원 허용 여부가 결정돼야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입

장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권익위 등은 2월초 민간 언론재단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접점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문협회는 ‘공익법인법’ ‘민법’ 등에 따른 민간 공익언론재단의 언론인 연수지원에 ‘신문법’에 근거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과 법적 지위에 있어 다르지 않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문체부, 권익위, 법제처, 법무부 등에 지난해 10월 26일, 12월 16일, 12월 26일 등 3차례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언론 겨냥한 무차별 규제입법 움직임

신문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언론보도 기준 마련

해외 민주주의 국가선 유례없는 발상

신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도를 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에 관한 보도 기준을 마련해 언론에 강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정부 부처가 직접 인터넷신문 콘텐츠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서도 여성가족부에 제출됐다.

작년 말 정부광고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개악기도에 이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규제 입법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각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며 언론보도에 대한 허가·검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22일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한 것이 골자이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대책 마련 등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극적인 보도로 인하여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인권까지 침해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16일 문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내 언론계가 미성년자 및 아동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규정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제재기준 등을 통해 자율규제 방안을 중층적으로 마련해 지속적인 자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언론보도를 국가가 통

제하려는 발상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한 허가·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
최영희(전 국회의원) 외 2만 2359명이 1월 5일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예외조항이 삭제될 경우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12일 문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①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이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 콘텐츠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고 ②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문광고에 유해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단(豫斷)으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며 ③일부 인터넷신문 문제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2(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 〈신설〉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언론보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

신문 전체로 확대해 〈신문=청소년 유해매체〉라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그간 언론계는 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음란 내용이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신문광고는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신문에 대한 법적 제재는 최소화하고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 지원체계

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또 “해외에서도 국가기관이 신문 콘텐츠의 유해성을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며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 경우 ‘음란 광고’를 청소년에게 유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음란 광고를 직접 제작해 유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언론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자체기사 비율 30→50%로 강화해야”

신문협회, ‘신문법시행령 개정안’ 의견

‘취재 및 편집인력 5명이상 상시 고용’ 등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에 대한 신문법시행령 관련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들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신문법 시행령상 유효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은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게재할 것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등 2개만 남았다(시행령 2조 ①항).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18일 문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인터넷신문의 자체생산 기사 비율 기준을 현

행 30%에서 50%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현재 결정으로 인터넷신문의 난립과 사이버 언론 행각을 예방·차단할 수 있는 안전판이 사라졌다”면서 “30%라는 자체 생산 기사 비율만으로는 독립된 언론매체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해당 시행령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문법시행령에 규정한 인터넷신

문의 자체 생산 기사 비율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뷰징·베껴쓰기 등을 통해 자체 생산 기사 비율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도 철저히 금지해야 하고, ‘자체 생산 기사’에 대한 기준과 정의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신문상 2월 28일까지 접수

신문협회는 올해 ‘한국신문상’ 후보를 공모한다. 뉴스취재 보도와 기획·탐사보도 두 부문이며, 부문별 최대 2건씩 선정된다. 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의 추천서를 공적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문사별 신청 건수에 제한은 없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진다.

실검 옆에 ‘뉴스 토픽’ 신설

▶1면에서 계속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3월부터 ‘뉴스토픽(구 핫토픽)’ 서비스를 실검과 병렬 배치한다는 것이다. ‘뉴스토픽’은 최근 3시간 동안 작성된 뉴스에서 많이 언급된 구절을 키워드로 보여주는 새로운 서비스다. 연예·스포츠 등 연성 또는 선

정성 검색어 위주로 도배되는 현행 실검 서비스를 어느 정도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의 노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대표내정자는 “실검과 상호보완 성격을 갖는 ‘뉴스토픽’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정보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신문협회가 그동안 지적해 온 실검 서비스의 문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인터넷뉴스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저널리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뷰징을 사실상 조장하는 포털의 실검 제도는 폐지되거나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 저널리즘의 복원을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 뉴스토

픽이 추가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실검 서비스가 예전보다 오히려 강화돼 뉴스 연성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뉴스 노출 알고리즘 개선, 위치 기반 뉴스서비스(예 : 호남지역 거주자에게 호남 현지 매체가 생산한 해당 지역뉴스 우선 노출), 포털 뉴스 유통현황 및 독자 이용행태 정보 공개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이번 실검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뉴스스탠드

를 포함한 PC 기반 뉴스서비스와 모바일 뉴스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털의 요청에 따라 뉴스제휴평가위 활동에 매체사가 흔쾌히 참여했으나 지난 1년간의 운용 결과 부담은 매체사가 짊어지고, 이미지 개선효과는 포털이 누린다는 회원사들의 이유 있는 불만에 포털이 성의를 갖고 답을 내놓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정부 대신 기업이 공적 책무 하겠다는데 방해하나?” 언론인 연수지원 금지로 고품격 저널리즘 가로막아

신문협회는 ①‘공익법인법’ 등에 따른 민간 공익언론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은 ‘신문법’에 근거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과 법적 지위에 있어 다르지 않으므로 허용해야 하며 ②신문사(법인)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 등의 금지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의 영업활동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법제처 등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입장이 서로 달라 1월 26일 현재까지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20일 국무조정실 등에 △신문사(법인)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민간 공익언론재단의 언론인 연수에 대한 협회 의견을 전달하고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는 연수자 선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함께 제안하기도 했다.

민간 공익 언론재단 언론인 연수지원 : 금지보다는 보완·운영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

“해외연수 비용을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기업의 기자에 대한 연수비용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근거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언론재단이 연수비용 지원에 관한 내부기준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권익위의 해석에 대해...

민간 언론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됐다.

공익법인법의 경우 제2조에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즉 민간 언론재단은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지원 대상에서 언론인은 특별히 배제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

민법은 제32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

단은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 언론재단은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인 언론인 장학 및 연수지원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수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권익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공익법인법’ 등에 따른 민간 언론재단도 신문법에 근거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연수와 마찬가지로 법과 정관에 따라 언론인 연수 지원 및 장학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언론인 해외연수·어학교육·저술출판지원 등은 특정 직종에 국한된 지원인 점.”이라는 권익위 해석에 대해... 청탁금지법 대상인 일반 공무원들은 국세로 운영되는 해외 연수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또 다른 대상인 교직원들은 교육청 등을 통해 해외연수(1인당 연간 6,000만 원선)의 기회를 얻고 있다. 이에 비해 언론인에 대한 민간 언론재단의 연수 지원을 금지할 경우 언론인은 연간 10인 정도의 언론진흥재단 연수기회만 열려있어 심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언론은 다른 산업이나 제조업과 달리 공동체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인프라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발전시키는 공공재(public goods)인 것이다. 이 점에서 공무원이나 교직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특정 직종에 국한된 지원이라며 금지할 것이 아니라 언론 등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해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계발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액이 통상적으로 1년에 1인당 5000만원을 넘어서는 점.”이라는 권익위 해석에 대해...

일반 공무원의 해외 연수비용은 연간 6000만~7000만원 수준으로 체재비, 항공료, 의료비, 생활준비금, 귀국 이전비 등까지 지원하고 있다. 교직원 해외 연수자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1인당 연간 600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 언론재단의 해외연수비용은 연간 3300만~5000만원(1인당) 수준으로 체재비, 항공료 등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연수비용의 재원은 특정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가 출연한 금전인 점,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여부에 민간기업이 설립한 언론재단 이사진이 관여하는 점”이라는 권익위 해석에 대해... 이는 재단의 실질적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재단 설립 시 출자금은 기업이 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기업은 연수대상자 선발에 관여하지 않으며 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연수자 선발 및 심사는 권익위 주장처럼 재단 이사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재단의 외부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기업이 민간공익재단에 출연한 돈은 이미 기업의 돈이 아니며 국가사회에 환원한 것이며 재단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자산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기업이 돈을 출자해 언론인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이유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인정해 언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고품격 저널리즘을 구현하자는 취지이다.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업은 자사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 환원을 통해 공적 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기사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는 해석에 대해...

권익위의 인식은 언론과 기자의 역할, 사명 등에 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정 기업으로부터 연수지원을 받은 기자가 해당기업에 포획돼 그 기업에 유리한 기사를 쓰는 등 유착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단(豫斷)은 언론과 기사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기업이 언론인 연수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에 유리한 기사, 논조가 목적이었다면 기업 취재를 주로 담당하는 ‘산업부’ 기자만을 선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산업부 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히 높지 않다.

신문협회는 이상의 이유로 민간 언론재단의 언론인 연수지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 현행 민간 언론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이

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보완하여 장점을 살려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올바른 접근일 것이다.

신문사(법인) 청탁금지법 적용 : 권익위 법문 오독(誤讀)으로 사태 악화

권익위는 신문사(법인)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권익위가 펴낸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에서는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해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문사(법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첫째, 제5조 ‘제3자를 통한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부족하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청탁하는지, 혹은 제3자를 통해 청탁하는지를 따질 것 없이 공직자등에게는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해당 공직자등이 직접 직무를 수행하는지,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따질 것 없이 공직자등에게는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확한 법문 독법이다.

권익위가 이를 ‘제3자를 통한 청탁’으로 읽었다면 치명적인 법문 오독이다. 청탁금지법 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 “제3자를 통한 금품수수도 금지된다”라고 유추해석하면서 5조를 근거로 내세울 수는 없다.

둘째, 제8조 ‘제3자를 통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적용은 무리한 적용이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규정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는 적용대상을 자연인인 ‘공직자등’에 한정하고 있다.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제3자를 통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

하는 내용은 이 조항에 없다.

또한 제3자 뇌물수수는 ①뇌물 공여자 ②실질적인 뇌물수령자인 공직자 ③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대리인 격인 제3자 등 3인이 개입해 이뤄지는 범법 행위이다. 신문사의 후원·협찬 영업에 ‘제3자 뇌물수수’를 적용해 보면, 후원기업은 신문사 임직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임직원의 대리인 격인 신문사’에 금품을 주는 구도가 된다. 신문사를 임직원의 대리인 격으로 보는 해석은 비상식적이며 설득력이 떨어진다.

셋째, 제3자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되는 유일한 대상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다.

금품수수와 관련해 제3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을 찾는다면 불법 수수된 금품의 신고 및 처리를 규정한 이 법 제9조가 있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하 생략)

이 조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자를 ‘공직자등’ 및 ‘공직자등의 배우자’라는 ‘2종류의 자연인’으로 분명하게 한정하고 있다.

‘공직자등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인척, 친지’ 등 제3자 금품수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자연인들조차 제외돼 있으며, 이는 권익위도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즉 ‘타인을 통한 금품수수’를 금지함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 유일한 타인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이다. ‘신문사(법인)의 영업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제3자를 통한 금품수수이므로 제재대상이 된다.’는 권익위의 해석은 매우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자연인인 ‘공직자등’으로 법인인 신문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현행 청탁금지법으로는 신문사의 후원·협찬营业을 규제할 수는 없다. 권익위의 해석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신문은 교육·국방·문화와 같은 공공재 새 정부, 미디어정책철학 재정립해야

신문협회, 2017년 13대 정책과제 선정
회원사·관련부처·국회 등에 배포 완료

신문협회는 최근 '2017 신문업계 정책과제' 개정판(사진)을 제작해 배포했다. 2014년 12월 초판에 이어 만 2년 만에 다시 발행한 이번 정책과제 안내서에는 신문산업 활성화와 정부 지원의 당위성, 현재 신문업계가 직면한 13개 주요 당면과제 및 목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았다.

신문협회는 안내서에 담긴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국회 관련 상임위, 학계 및 경제계 등과 업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1월 회원사를 비롯해 국회, 정부, 언론유관기관에 일괄 배포했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신문을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보강됐다는 점이다. 신문은 공동체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인프라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발전시키는 대표적인 '공공재'(public goods)이다. 신문의 공공재적 특성은 '외부성' 또는 '외부효과'(externality)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외부성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행위가 제3자 또는 사회 전체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학문, 교육, 기초과학기술, 문화예술, 국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신문은 권력에 대한 감시견(watch dog) 역할을 하고, 다양한 관점이 경쟁하는 공적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좋은 저널리즘(fine journalism), 즉 신문을 필두로 한 '담론성 언론'은 다른 공공재들과 마찬가지로 외부효과가 큰 전형적 공공재인 것이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신문협회는 개정안내서의 취지를 반영해 2017년 협회 사업의 무게중심을 '미디어 정책철학 재정립'에 두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신문을 '사회적 필수공공재'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책과제 안내서는 이어 2017년 신문협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로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등 13개를 제시했다. 정책과제별 세부 계획과 추진 방안 등을 소개한다.

①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신문(다수) vs 포털(복점)〉이라는 신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 구도 아래 불평등한 거래가 고착되고 있다. 신문-포털간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포털은 뉴스 매개 등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역할에 집

중하도록 하고, 언론은 원천 정보 생산자로서 본연의 '뉴스 서비스'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털 뉴스 서비스 방식을 현행 인링크 방식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정 뉴스 저작권료 산정해 계약에 반영하되 언론과 포털의 자율협상 실패 시 정부가 나서야 하며, 뉴스의 포털 매출 기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독자의 포털 뉴스 이용 데이터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뉴스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또는 가이드라인)'를 제정·시행할 필요가 있다.

② 디지털 저널리즘 복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1년간 운용한 결과 인터넷뉴스 공간의 정화(淨化)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결실을 보았으나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 활성화, 건강한 발전 등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 나아가 이미지 개선효과는 포털이 누리고 부담은 매체사가 짚어지는 '이익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제휴평가위 활동이 매체사 규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범 언론계가 포털의 매대(賣臺) 청소를 하정 받은 듯하다”는 초기의 문제의식이 상당 부분 현실화된 형국이다.

제휴평가위가 출범 시 목표한 ①사실상 어부지름을 유도하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제도 개선 ②'클러스터링' 기사의 노출 알고리즘 및 노출 결과' 개선 ③포털 뉴스 유통현황 및 독자 이용행태 정보 공개 ④사용자 위치기반 서비스(예: 호남지역 거주자에게 호남 현지매체가 생산한 해당 지역뉴스 우선 노출) 등의 의제에 역량을 투입하는 한편, 이익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크다.

③ 정부광고, 객관적 기준(부수·브랜드 파워·열독률 등)에 따라 집행돼야

지자체 광고가 매체력이나 광고 효과와 무관하게 단체장의 자의

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광고의 '나눠먹기식 배분'은 군소신문 난립을 심화시켜 언론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광고도 그 목적, 광고비용, 광고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매체 및 광고 방식을 정해야만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자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지역 언론은 '보편적 정보 접근성' '풀뿌리 민주주의 요람' 등의 측면을 고려해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며,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중앙언론에 비해 우선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 언론 내부의 매체별 정부광고 배분에서는 발행·유가부수, 매체의 브랜드 파워, 구독·열독률 등 객관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광고시장 정상화 투명화는 ABC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내세운 취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 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정부광고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정부광고의 효율적 집행원칙을 세우고 ▲결과를 점검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단, 이 위원회 구성에 정치색이 개입될 경우 정부광고의 정치적 나눠먹기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므로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④ 정부 광고 수수료 인하

정부·지자체, 공기업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고, 재단은 집행된 광고료 중 10%를 대행수수료로 떼서 가져간다. 더욱이 신문사가 직접 수주한 광고에 대해서도 대행수수료를 징구한다. 매체사 수익의 일부를 '통행세' 형태로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 대행수수료를 5%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 수수료로 구성된 재원은 '신문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⑤ 매체 균형 발전 고려한 방송 정책

지상파방송은 2015년 9월 광고총

량을 허용받자마자 중간광고 도입이라는 새로운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여러 매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타 매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에 빠뜨려 매체 균형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방송광고 정책은 매체 간 균형 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문 등 다른 매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은 본질적 가치가 상이해 비대칭 규제는 필요하다. 이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조치다. 아울러 미디어 정책 총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신문·유료방송 등 여러 매체와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⑥ 언론진흥기금 규모 확대

언론진흥기금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2017년 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예산의 일반회계 540억 원 대부분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에 의해 조달된 것이다. 이 돈은 예컨대 공용인프라 구축 등 '개별 매체사가 직접 투자하기는 힘들지만 매체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가 미디어여야 하며 사업의 공익성 수준이 반드시 높을 필요는 없다.

반면, 언론진흥기금은 출처가 세금인 만큼 공익성을 염두에 두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 즉 '국민의 정보복지 제고'를 제1 정책목표로 삼고 국민이 직접적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기금은 국가 재정의 일부인 만큼 출처도 국민의 세금이어야 한다.

두 돈의 출처가 상이한 만큼 활용 방법에서도 일정한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진흥기금에 대한 적극적 국고 출연이 이뤄져야 하며, 언론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도 발굴해야 한다.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복권 수익금은 임대주택의 건설, 국

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용처에 언론산업 진흥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⑦ ABC부수공사제도 개선

현행 ABC부수공사제도는 △통계학적 엄정성이 없는 '샘플링 지국 조사' 방식을 채용해 조사의 신뢰도가 낮고 △본사공사와 지국공사로 나눠 매년 두 차례 실시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의 중복 투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료부수 공사가 되레 출혈 판촉경쟁을 유발해 신문시장을 왜곡하고 신문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공사방식을 ▲절차가 간편해 조사비용이 저렴하고 ▲전수조사 방식이어서 결과가 투명하며 ▲광고주들에게 더 유용한 '본사공사 및 발행부수 중심의 공사'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 부수공사만으로는 뉴스 소비가 신문→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 ABC부수공사에 디지털 신문 및 PDF신문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⑧ 신문을 활용한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NIE)

신문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매체를 활용한 융합교육'에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신문사들의 강점인 시사성 있는 정보·다양한 교육 콘텐츠·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수업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매체이다.

신문 리터러시 교육이 공교육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신문활용교육(NIE) 기금을 조성해 △NIE 실천학교 신문구독 지원 △교육과정에 맞는 신문 기사 검색시스템 구축 △교사, 학교 경영자 대상 설명회 및 연수 △신문사 협력을 통한 교재 개발 △전담기구 운용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5면에 계속



“신문·방송·통신 총괄하는 ‘단일 미디어부처’ 바람직”

언론학자들, 차기 정부조직 구도 제안

인터넷에서 기금 조성해 신문 등 지원해야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차기 정부의 미디어 조직은 신문·방송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19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미디어 정책 담당 부처를 합의제 위원회로 통합하는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7~10명 내외의 상임위원으로 구

성된 미디어위원회가 신문·방송·통신·콘텐츠·인터넷·광고 등 미디어 영역의 정책 수립과 실행, 방송 사업자와 통신,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사후심의, 신문지원정책 등을 모두 담당하는 모델이다.

심 교수는 “매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방송과 통신, 인터넷 영역에서 기금을 조성해 방송, 영상, 콘텐츠 진흥 외 신문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신문 유관산업과 정부광고 수입만

으로 신문 산업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신문지원 제도를 도입한 주요국가처럼 ‘교차보조’(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력을 이용해 얻은 초과이익을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보조하는 것)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13일 열린 ‘미디어의 혁신과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 토론회에서는 현행 미래창조과학부를 확대 개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규제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신문 포함) 및 문화 분야 등을 통합한 정보문화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이날 제안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사실상 해체되고 기초예술이나 관광, 체육 기능은 별도의 외청이나 준정부조직으로 이관된다. 신설되는 정보문화부가 전반적인 미디어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규제만을 담당한다.

두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신문과 방송을 각각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통합하는 것. 다만 심 교수의 개편안은 ‘합의제 방식에 의한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김 교수는 ‘독임제 부처를 통한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직 통합 시 ‘진흥’ 산업인 신문과 ‘규제’ 산업인 방송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방송은 규제 영역, 신문은 비규제(시장) 영역인데,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부처에 신문을 규제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신문협회는 신문, 방송, 통신 등 미디어의 균형발전과 공적 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미디어정책 총괄 기구로 ‘미디어위원회’(가칭) 등의 구성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기에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프레스센터 소유권’ 결국 소송으로

2월 17일 첫 변론 준비기일

당초 2월 3일 열릴 예정이었던 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민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의 요청으로 2월 17일로 연기됐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언론재단과 지난해 8, 10, 12월 세 차례에 걸쳐 조정심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올 들어 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을 제기했다. 코바코는 소장에서 언론재단을 상대로 2014년부터 발생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등 216억 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3차 조정심의회에서 언론재단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70%(연 8억3천만 원)와 시설물 신·증설액의 70%를 부담하고 △건물 관리운영에 따른 제 비용, 보전·보수에 대한 수선비용은 전액 언론재단이 부담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코바코가 단칼에 거절했다.

WAN총회, 6월 7~9일 남아공 더반에서



제69차 세계신문협회(WAN-IFRA) 연차총회가 6월 7~9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다. 세계편집인포럼(WEF)도 동시에 개최된다.

참가비는 2월까지 신청할 경우 1790유로, 3~4월 신청 시 1890유로이며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990유로이다. 신문협회 사무국은 2월

초 회원사 발행인들에게 총회 참가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문사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신평 재구조 △고급 콘텐츠 차별화 방안 △변화·혁신 프로세스 △독자·광고주와의 관계 형성 등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난해 미디어 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짜 뉴스’에 대한 언론의 책임 및 대응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2017 국제 컨퍼런스
퍼블리시 아시아(WAN) 4월 18~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디지털미디어유럽(WAN) 4월 24~26일, 덴마크 코펜하겐
미디어X체인지(구 Nexpo) 4월 30일~5월 3일, 미국 LA
IPJ 총회 5월 18~20일, 독일 함부르크
INMA 총회 5월 21~23일, 미국 뉴욕
IFRA엑스포 10월 10~12일, 독일 베를린

2017년 13대 정책과제 선정

▶4면에서 계속

신문 규제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⑨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

미디어 환경이 혼탁해질수록 담론성 매체인 종이신문의 역할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각종 신문 산업 진흥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정부광고시행심의위원회 설치로 정부광고시장의 정치적 오염이 우려되는 정부광고법 제정안 △‘인격권 침해배제 청구권’ 도입으로 포털 기사검색 결과뿐 아니라 언론사 원본 기사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인터넷신문의 등록 기준 중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조건을 삭제하자는 신문법 개정안 등

⑩ 신문 매체력 조사 방식 개선

종이신문의 열독률이나 가구 구독률 조사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현행 신문 매체력 조사방식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의 뉴스 소비 행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신문 매체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표적 이용자 조사업체조차 열독률과 인터넷 이용조사를 정확한 기준 없이 각각 제시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기준도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신문 매체력 측정을 위해 부정확한 가구구독률 조사는 즉각 중단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조사방식도 독자의 기억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의 기록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신문사·조사 및 측정기관·광고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신문 이용 관련 개념 및 측정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신문협회는 2017년 새로운 조사방법을 제안하는 한편 그에 따른 조사의 시험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⑪ 뉴스 저작물 보호 위한 저작권법 개정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기사를 어문저작물로 규정하고 독립적인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뉴스 저작

물 무단 DB화 금지 및 저작권 사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하며 △뉴스를 유료 구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⑫ 매입 세액 공제, 구독료 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신문사에 신문용지, 신문잉크 등의 물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혜택이 필요하다. 신문 등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 할 필요가 있다.

또 매체 다양성 확대를 위해 매체산업 재정지원을 위한 세수를 확보하고 신문사가 운영하는 R&D 연구소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 뉴스 기반의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⑬ 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 소유 및 관리·운영권 정상화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요람이자 언론의 전당인 프레스센터는 1962년 언론계 공동자산으로 출범했다. 당시 건물명 및 법인명은 ‘신문회관’. 하지만 1980년대 프레스센터의 건축과 함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분리됐고, 소관부처마저 문체부와 방통위로 분리되면서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다.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설립 취지 및 역사에 맞게 언론계 공동자산으로 소유권이 정리되어야 한다.

정부의 최초 합의안(2010년 4월)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체부로, 방송회관과 광고회관은 방통위가 관할해야 한다. 코바코 지분의 100% 소유자인 정부가 코바코를 감자(減資)하는 방식으로 관련시설을 국고 환수 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사 동정

매경, '매경 들려주는 뉴스' 첫선
매일경제(발행인 장대환)는 1월 23일부터 1면 기사를 스마트폰과 PC에서 들을 수 있는 '매경 들려주는 뉴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머투, '제14회 대한민국 IB대상'
머니투데이(발행인 박종면)는 경제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제14회 대한민국 IB(투자은행)대상' 수상작을 공모한다. 접수는 2월 3일까지다.

전자, 과학기술한림원과 MOU체결
전자신문(발행인 구원모)은 1월 23일 과기한림원 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강원, '미·인 캠페인' 업무협약
강원일보(발행인 이희종)는 1월 19

일 본사에서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와 '미·인(미소짓고 인사하기) 캠페인&문화도민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민, 본문서체 확대
강원도민일보(발행인 김종석)는 1월 23일부터 신문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본문서체를 기존 9.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했다.

경기,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
경기일보(발행인 신선철)는 1월 9일 (사)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신문, '제13회 창원야철마라톤'
경남신문(발행인 남영만)은 창원시체육회가 함께 '제13회 창원야철마라톤대회'를 4월 9일 창원스포츠파크에서 개최한다. 접수는 3월 10일까지다.

경남일보, '2017 진주남강마라톤'
경남일보(발행인 이재근)는 3월 26일 진주 신안·평거 남강 둔치에서 '2017 진주남강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접수는 3월 2일까지다.

경북도민, 비회원에 PDF 서비스
경북도민일보(발행인 정의화)는 1월 19일부터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로그인 없이 지면보기(PDF)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인, '제4기 미래사회포럼' 수료식
경인일보(발행인 송광석)는 1월 19일 '제4기 미래사회포럼' 수료식을 개최했다.

매일, '제23회 늘푸름환경대상'
매일신문(발행인 여창환)은 화성 장학문화재단과 함께 '제23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는다. 대상은 대구·경북지역의 개인 또는 단체로 접수는 3월 6일까지다.

부산, '제6기 청소년기자단' 모집
부산일보(발행인 안병길)는 (주)부일에듀와 함께 '제6기 부산일보 청소년기자단'을 모집한다. 접수는 2월 15일까지다.

울산매일, '태화강국제마라톤대회'
울산매일신문(발행인 이연희)은 '제14회 태화강국제마라톤대회'를 3월 26일 개최한다. 접수는 2월 26일까지다.

중도, KTC사회적협동조합과 MOU
중도일보(발행인 김원식)는 19일 본사에서 KTC사회적협동조합과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매일, 초록우산어린이와 업무협약
중부매일(발행인 이정)은 1월 1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신한 기획·스토리텔링으로 양질의 콘텐츠 생산하자”

중부매일 창간 27주년 기념식

중부매일(발행인 이정)은 1월 20일 청주 도성 한정식에서 창간 2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정 발행인은 “베를리너 판형 변경은 중부매일이 그동안 가지 않았던 길이기에 막연한 두려움이 따르지만,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참신한 기획과 스토리텔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자”고 당부했다.

한라일보 새 발행인에 강만생 전 부회장

한라일보는 1월 16일 임시주주총회와 제76차 이사회를 열고 새 발행인 겸 대표이사에 강만생 전 한라일보 부회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다. 강 발행인은 200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발행인을 역임한 바 있다.

약력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한라일보 논설위원, 편집국장, 대표이사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발행인 동정

이병규 문화일보 발행인은 1월 2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김영만 서울신문 발행인은 1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은 1월 23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열린 '2016년 리서치 우수 증권사 및 베스트 애널리스트'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발행인은 1월 16일 본사에서 열린 '2017 한경신춘문예'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이준희 한국일보 발행인은 1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7회 한국출판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발행인은 1월 19일 호텔인터불고원주에서 열린 '2017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발행인은 1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재경 포항향우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하성기 경상일보 발행인은 1월 18일 울산MB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송광석 경인일보 발행인은 1월 9일 본사에서 열린 '2017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남상현 대전일보 발행인은 1월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27회 대전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손인락 영남일보 발행인은 1월 13일 본사에서 열린 '2017 영남일보 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신문유통원장에 노재현 전 중앙복스 대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월 23일 노재현 전 중앙복스 대표이사를 새 신문유통원장으로 임명했다.

〈바로잡습니다〉		
신문협회보 1월 16일자 5면에 게재된 '2017년도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 기사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도	정정
언론인 해외 단기연수 지원	-	310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 지원	1700	1800
단체지원	900	990

더 높은 품질, 더 넓은 세계...

최고의 신문인쇄

KORINK가

약속 드립니다.

KORINK 한국신문인크(주)

www.korink.com